아세안·APEC 정상외교 돌입… 日 다카이치와 양자회담

李, 3박4일 일정 필리핀 출국
"韓-필리핀 77년 우호협력 관계 건설·조선 이어 AI·우주 등 확대"
19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참석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해 의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3박4일 간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도착에 앞서 공개된 현지 언론 '필리핀 스타(The Philippine Star)'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긴밀한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덕분에 한국의 잠재력이 확대되었고, 세계와의 교류가 늘어났다"며 "아세안은 한국의 둘째 가는 교역·투자 파트너이고, 한-아세안 간 인적 교류는 연간 1200만 명에 달한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필리핀과 인프라·제조업을 넘어 협력 분야를 넓히겠다는 비전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지난 77년간 양국은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한국 기업이 건설한 다리는 필리핀의 섬과 섬을 잇고, 한국 기업이 수빅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들은 앞으로 대양을 누비며 필리핀과 세계를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의 협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우주, 원전, 핵심광물 등 새로운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아세안 정상회의를 소화한 후 이튿날인 17일 한중일 3개국이 함께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개별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날 아세안·에이펙 정상회의 출국 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셔틀 외교 차원 이후 약 반년만이고 양 정상의 네 번째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으로 향한다. 오는 18일에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CEO 서밋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19일엔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X(옛 트위터)에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했던 협력 과제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협력을 이어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외교 협력 확대와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성장·번영하는 길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AI와 문화창조 등 미래성장 분야 협력,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초국가 범죄 등 여러 나라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에도 주도적인 역할로 성과를 이끌겠다"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은 더 안전하고, 우리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 성장 정책에 대한 아세안과 APEC 회원국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순방에서 주요국과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외교를 지속적으로 구현하겠다"며 "에너지 공급망, 초국가범죄, 식량안보 등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 논의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아세안·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韓 상고심 지연에 "조희대 탄핵" 대법 압박

민주당, 법사위서 심리속도 등 질타
국힘 "법원판결 노골적 개입"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심리 지연을 비판하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일부 의원은 판결 결과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의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선고 일정이 공지된 점과 내란 관련 사건의 심리 속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은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국민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다"며 "선고가 잘못 났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폭동에 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입장을 조 대법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재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지금 하신 말씀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성윤 의원도 내란 청산을 위한 사법부 역할을 강조하며 선고 자체보다 판결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뿐 아니라 최상목 전 부총리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진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1심은 2달도 안 돼서 끝났는데 왜 대법원은 5달째 결정을 안 하고 있는가"라며 "이진관 재판장을 재판에서 손 떼게 만들려고 그런 것인가"고 따졌다.

노 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며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규정한 법 취지를 거론하며 대법원의 심리 지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고기간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정작 법원이 재판 기한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 기소 사건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한 규정을 언급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에서는 6·3·3 원칙(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법적 강제 규정)을 지켜달라고 입법기관에서 법을 제정했다. 최대한 우선하고 신속하게 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이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李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땐 내각도 공범"
국민의힘, 靑서 현장 최고위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재명 탈옥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난 9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청와대 앞에서 또다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꺼낸 개헌론에 대해서도 특검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장동혁 대표·정점식 원내대표·정희용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장겸 의원·박충권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굴을 비쳤다. 참석자들은 "탈옥법 대리의결 내각도 공범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지칭하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재명 탈옥의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나라, 헌법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나라,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 바로 독재 국가"라며 "오늘 2026년 11월16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가 따라야 할 것은 정권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며 "판사가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안녕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려 한다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피하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의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며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의 의결을 하청 준 것이다. '탈옥의 외주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시도'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특검이 출범·임명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부터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수 기자

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조정식 의장 "두 분, 정치의 큰 어른"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인선했다.

조정식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의 인선 소식을 알렸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신한국당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등 보수 정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당 등 민주계열 정당에서 6선 국회의원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제4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조 의장은 "두 분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이끄셨고 존경 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시며 개헌에 대한 높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김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틔우셨다"며 "정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 쏟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헌은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한다. 첫째, 국회가 주도한다. 둘째,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셋째, 여야의 합의와 국민 동의로 추진한다"며 "자문위는 제10차 헌법 개정안의 의제와 개헌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헌법 전문, 기본권, 권력 구조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바라는 헌법의 모습을 폭넓게 살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내년 2027년이면 98년 헌법 체제가 40년을 맞게 된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 정신이 변하고 법과 제도도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며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며 국민 삶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